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는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활동이 정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상인회와 대형 유통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것도 정치에 해당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 사례를 정치로 본다면 일상생활에서 이해관계의 조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가 정치로 간주되어 정치의 범위가 끝없이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한 국가 고유의 활동만 정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 ① 갑의 관점은 국회의 국정 감사권 행사를 정치로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국가의 의사 결정 활동과 국가가 아닌 사회 집단의 의사 결정 활동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
- ③ 갑의 관점에 비해 을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④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공권력 행사를 통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정치로 본다.
- ⑤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에 따르면 국가 작용이 상위 규범으로부터 위임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근거할 것이 요구될 뿐, 그 법률이 헌법 이념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하다. 반면, B에 따르면 법률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정의에 합치될 것이 요구되므로, 헌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에 근거한 국가 작용은 정당하지 않다.

- ① A는 통치자를 법에 구속시킴으로써 행정 작용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 ② B는 법률에 근거한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A와 달리 B는 공포되지 않은 법률에 따른 통치 행위는 법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④ B와 달리 A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옹호한다.
- ⑤ A와 B 모두 자유와 평등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국가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된다고 본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에 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규범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평화적 국제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A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 결정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의한 통제 규정을 둔 것으로,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B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A는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이다.
- ② A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전 포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 ③ B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원리이다.
- ④ B의 실현 방안으로 ‘재외 국민의 국민 투표권 보장’을 들 수 있다.
- ⑤ B와 달리 A는 국내법의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기본권 유형임.) [3점]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사망한 자의 조카인 갑은 ○○법 조항이 자신으로 하여금 재심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자신의 A를 침해하고, 재심 청구권자인 친족과 그 외의 친족을 차별 취급하여 자신의 B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재심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 구제 절차로서 법의 이념 중 하나인 (가) 이/가 또 다른 법의 이념인 정의와 충돌할 때 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하는 절차라고 보았다. 나아가 해당 사건이 일반 형사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의 사건임에도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를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제한한 것은 법 생활의 안정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정의를 도외시한 것으로서 갑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보 기>

- ㄱ. A는 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다.
- ㄴ. B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 ㄷ. (가)는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 ㄹ. (가)는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하며 쉽게 변경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과 을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갑국과 을국 모두 t~t+2 시기 중 정부 형태가 1회 변경되었고, 그 시기는 서로 다르다. 갑국에서는 t+1 시기와 달리 t 시기, t+2 시기에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고, 을국에서는 t 시기와 달리 t+1 시기, t+2 시기에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다. 표는 시기별 갑국, 을국 행정부의 수반이 의회 제1당 소속인지 여부를 나타낸다.

구분	갑국	을국
t 시기	의회 제1당 소속 아님	의회 제1당 소속임
t+1 시기	의회 제1당 소속임	의회 제1당 소속 아님
t+2 시기	의회 제1당 소속임	㉠

*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와 동일하고, t+2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함.
** 갑국과 을국 모두 각 시기의 정부 형태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고, 각 시기 내 의회 전체 의석수 및 정당별 의회 의석수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으며, 무소속 의원은 없음.
*** 의원 내각제인 경우, 단독 내각 성립이 가능하다면 연립 내각은 구성되지 않음.

- ① t 시기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 ② t+1 시기 갑국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면, t 시기 을국의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검직할 수 없다.
- ③ t+1 시기와 t+2 시기에 을국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다면, t+1 시기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 ④ t+1 시기 갑국의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에 ‘의회 제1당 소속 아님’이 들어갈 수 없다.
- ⑤ t+2 시기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서로 다르다면, t 시기 을국의 행정부는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중 하나임.) [3점]

○○시에서 □□조례안이 확정되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음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다. 원고는 해당 조례안이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한 ㉠ 지방 재정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회계 연도마다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를 A에 제출할 권한과 의무를 B가 갖는데, 법원은 □□조례안에 근거하여 B가 사업 비용 지원 정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안이 ○○시의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① A는 ㉠의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B는 법령에 따라 B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③ A와 달리 B는 ○○시의 재정 운영과 관련된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④ B와 달리 A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⑤ 법원은 B가 재의결한 □□조례안이 ○○시의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7.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3점]

공익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A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역 내 매장 출입구 경사로 설치 의무화를 주장 하였다. 반면, 지역 소상공인의 이권을 위해 조직된 B는 출입구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과도한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C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소규모 매장의 출입구 경사로 설치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수립하였다.

- ① A는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기 위해 당정 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B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③ C는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한다.
 ④ B와 달리 A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⑤ C와 달리 A, B는 정치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14세)과 을(15세)은 병(15세)의 자전거를 함께 훔쳤고, 다음날 자전거를 함께 타고 놀다가 병에게 발각되었다. 병이 을을 급히 붙잡자, 을은 병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병이 저항하며 을을 밀치는 과정에서 을이 넘어졌다. 을이 갑에게 도와 달라고 하자, 갑은 병을 가격하였다. 이후 검사는 절도 및 폭행 혐의로 갑에 대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을에 대하여는 공소 제기를 하였다. 또한 검사는 병이 을을 붙잡은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는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 보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보 기>

ㄱ. 검사는 갑의 폭행이 을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ㄴ. 검사는 을의 절도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요건 판단 시 위법성과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ㄷ. 검사는 병이 을을 붙잡은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B, C, D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17세의 친구들이다. 어느 날 A, B, C는 각각 D로부터 SNS를 통해 “오늘이 아이돌 콘서트 입장권 판매 마감일인데, 입장권을 살 돈이 부족해. 2주 후에 돈을 돌려줄 테니 오늘까지 1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 A는 돈을 빌려줄 의도로 D에게 자신의 용돈 10만 원을 즉시 이체해주었고, 이를 수령한 D가 보낸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다.
 ○ B는 “알겠어. 오늘 중으로 보내 줄게.”라는 답장을 D에게 보냈고, D는 이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B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다음날 까지도 D에게 돈을 보내 주지 않았다.
 ○ C는 “10만 원은 못 빌려줘. 지금 5만 원은 빌려줄 수 있는데 1주일 후에 갚을 수 있어?”라는 답장을 D에게 보냈다. D가 이 메시지를 받았으나, D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C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다음날 까지도 D에게 돈을 보내 주지 않았다.

<보 기>

ㄱ. D가 A에게 보낸 감사의 메시지는 승낙의 의사 표시이다.
 ㄴ. A의 D에 대한 법률 행위는 A의 법정 대리인이 A의 행위 능력 제한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ㄷ. A와 D 사이의 계약과 B와 D 사이의 계약은 모두 성립하였다.
 ㄹ. B와 C 모두 D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회사에서 근무하던 갑은 직무상 명령 불이행 및 직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 해고되었다. 이에 갑은 □□ 법원에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갑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 회사가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갑이 그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재심 판정이 적법하여 사용자가 구제 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하는 것일 뿐 해고의 유효성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① 갑은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과 별도로 ㉡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 노동 위원회와 달리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③ ○○ 회사는 중앙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④ □□ 법원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 회사의 갑에 대한 해고가 갑의 근로 3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⑤ 갑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다면, 갑의 구제 신청과 별개로 노동조합은 갑에 대한 부당 해고를 이유로 하여 독자적으로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11.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신문 ◇◇◇◇년 ◇◇월 ◇◇일

주한 ○○국 외교관 갑은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 갑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갑은 자신이 외교관이기 때문에 주재하는 국가에서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상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국제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국제 사회에 널리 적용되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외교관의 권리가 규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 기>

- ㄱ. ㉠과 ㉡ 모두 주권 국가의 공식적 입법 기관에서 제정되었다.
 ㄴ. 외교관의 면책 특권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는 ㉡에서 ㉢으로 구체화되었다.
 ㄷ. ㉢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국제 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ㄹ. ㉣은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국제 재판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법률안을 의결하였고, 하급심 법원의 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판하는 B의 장(長)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갑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였다. 한편, 정부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의 심의를 거쳐 □□ 법률안을 A에 제출하였다. 그 심의 기관은 C, D, E로 구성되며 E는 D의 임명 제청권자이다. 이후 C는 갑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정부로 이송된 ○○ 법률안에 이의서를 붙여 A로 환부하였다.

- ① A가 의결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에서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찬성했다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② B의 장(長)은 헌법 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③ C가 A로 환부한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A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될 것이 요구된다.
 ④ D와 달리 E는 A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A는 E뿐만 아니라 D의 해임도 의결할 수 있다.

13.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 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 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민법상 배상액의 예정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기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그로 인한 손해 배상액을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약정한 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약정한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데, 이는 A에 대한 제한의 한 형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① 소유권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② 당사자 간 힘의 균형과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하고 있다.
 ③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④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행위 규범으로만 기능할 뿐 재판 규범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갑은 ○○법 조항 위반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갑은 기소 유예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A는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을은 갑과 동일한 혐의를 받아 ○○법 조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 ○○법 조항에 대한 (가) 제청을 B에 신청하였다. B가 이를 기각하자 을은 ○○법 조항이 청소년과 보호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A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A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① A는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② B의 법원은 A의 탄핵 결정 이외에는 파면되지 않는다.
 ③ B는 직권으로 A에 (가)를 제청 신청할 수 있다.
 ④ 을은 자신에 대한 기소 처분 그 자체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⑤ 갑과 달리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을 요구한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400명으로 구성되며, 초대 의회는 임기가 4년인 의원 200명, 임기가 2년인 의원 20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2년마다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임기가 4년인 의원을 200명씩 선출하고 있다.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의원 수는 동일하며, 초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실시된 t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체 선거구 중 절반이 넘는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에 있다. 표는 t년, t+2년, t+4년 의회 의원 선거에 따른 정당별 의회 의석률과 t+2년 대비 t+4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정당별 당선자 수 변화를 나타낸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t년	40	10	20	30
	t+2년	40	5	15	40
정당별 의회 의석률(%)	t+4년	30	5	15	50
	t+2년 대비 t+4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정당별 당선자 수 변화(명)	-10	-10	+10	+10

* 정당은 A~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는 없음.

** 의회 의원 수는 400명으로 유지되었고, 의원이 임기 만료 전 도중에 교체된 적은 없으며, 의원의 당적 변경은 없음.

t+4년 의회 의원 선거 이후, 갑국은 의원 정수와 2년마다 선거를 통해 의회 의원을 200명씩 선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아래와 같은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 <개편안 1> 선거구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각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 수를 2배로 늘림.
 <개편안 2> 선거구를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고,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함.

<보 기>

- ㄱ. t년 대비 t+2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자 수가 감소한 정당은 A당과 C당이다.
 ㄴ. B당뿐만 아니라 C당도 t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자 수와 t+4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자 수가 같다.
 ㄷ.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는 현행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개편안 1> 적용 시에는 발생한다.
 ㄹ. t+6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 <개편안 2>가 적용되고 D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이 50%라면, D당은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 원칙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와 법 AI 학습방

※ 우리나라 형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신설한다고 할 때, 해당 규정을 죄형 법정주의의 관점에서 평가한 진술이 옳은지 여부를 표기(✓)하세요.

제○○조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1. 법률이 아닌 회사의 자치 규범인 정관에 의하여 구성 요건을 정한 것은 A에 위배되며,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면 그것도 A에 위배된다. 예(✓) 아니요() 정당!

2. 제○○조 신설 이전의 정관 위반 행위에 대해 제○○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B에 위배된다. 예(✓) 아니요() 정당!

3. 징역형의 기간을 정하지 않아 형벌의 구체적인 범위가 불분명한 것은 C에 위배된다. 예(✓) 아니요() 정당!

- ① B는 형벌 법규에 처벌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의 법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② C는 입법자가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형벌이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B와 달리 A는 입법자의 자의가 아니라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이다.
- ④ C와 달리 A는 국가의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원칙이다.
- ⑤ B와 C 모두 범죄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벌의 내용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1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임.) [3점]

‘갑국은 을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A의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9개국 이상이 찬성하였으나 해당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B는 회의를 열어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채택하였다. 또한 이를 계기로 B에서는 A의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B의 토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참가국 전원의 동의로 채택되었다. 한편, 을국은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사법 기관인 C에 갑국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① B와 달리 A는 국제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안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C는 A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당사국에 대해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C는 B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은 실질 사항이 아닌 절차 사항에 관한 것이다.
- ⑤ ㉡과 달리 ㉢의 채택에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던 갑(15세)을 목격한 을(15세)이 그 훔친 물건을 빼앗으려 협박하자 갑이 도망쳤다. 다음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갑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 온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갑을 체포하였다. 이후 검사 병은 ㉡구속 영장이 발부된 갑을 구속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 하였고, 갑은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 ① ㉠과 ㉡ 모두 그 발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판사가 피의자와 직접 대면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갑을 기소하기 전에 병은 관할 소년부에 갑을 송치할 권한이 없다.
- ③ 갑은 1심 단계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갑은 2심 단계에서 법원에 을의 행위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다.
- ⑤ 2심 법원이 갑에 대하여 선고 유예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즉시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20]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드라마 '○○○' 줄거리

제1화

갑은 사실혼 관계인 A(남)와 B(여)의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갑의 출생 직후 B는 사실혼 해소 후 유학을 가면서 갑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갑을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후 홀로 양육 중이던 A는 C와 혼인하였고, C는 적법하게 갑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A와 C를 친부모로 알고 성장한 갑(19세)은 X 소유의 건물에서 X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B는 식당에서 근무 중인 갑에게 찾아가 자신이 생모라는 사실을 알렸다.

제2화

배우자와 사별하여 홀로 자녀 을을 양육하던 D(여)는 E(남)를 만나 사실혼 관계 중 병을 출산하였다. F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E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D는 사실혼 해소를 요구하였고 E는 이에 합의하였다. 이후 F는 E와 혼인하여 정을 출산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던 A와 C는 을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적법하게 입양하여 양육하였다. A와 C를 친부모로 알던 을(16세)에게 D가 찾아가 자신이 생모이고, E가 인지하지 않은 병을 자신이 홀로 키우고 있으며, E와 F는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NEW 제3화

B의 등장으로 혼란에 빠진 갑은 X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 중 부주의하게 손님 Y에게 음식을 쏟아 그의 옷을 훼손하였고 손에도 화상을 입혔다. 병원에 가기 위해 식당 건물을 나서던 Y는 설치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출입구 파손으로 인해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한편, D의 등장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을은 손에 들고 있던 친구 Z의 태블릿 PC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상시켰다.

19. 위 자료에 나타난 가족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이 친양자로 입양되었더라도 모든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을은 출생 시부터 A와 C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 ③ E와 F의 혼인 이후에도 을에 대한 E의 면접 교섭권은 부인되지 않는다.
- ④ E와 F의 이혼은 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⑤ E와 F의 이혼 직후 E가 사망한다면, E의 상속인은 병과 정이다.

20. 위 자료에 나타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E와 F 사이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D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E와 F는 D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 ② 을에게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 Z의 태블릿 PC 손상과 관련하여 A, C, D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부담한다.
- ③ 갑의 Y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Y의 훼손된 옷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와 화상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 ④ X가 갑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X는 갑이 Y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⑤ X가 출입구 파손으로 발생 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X는 Y에 대해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